

잼버리 파행부터 새만금 예산 복원까지

도·여야·도의회 삼위일체로 혼신

5개월간 잼버리 수렁서 빠져나와 재도약기틀 마련

세계 잼버리 파행 논란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국가예산 대폭 삭감 사태가 연달아 앞두고 새만금 SOC예산 복원 결과로 일단락됐다.

완전 복원까지 이르지 않아 안타까움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새만금국 제공항 등 핵심 사업을 내내에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다행이라는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새만금 예산삭감은 잼버리 파행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8월초 개막된 잼버리가 사상 유례 없는 불발더위와 태풍으로 증도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직후부터 정부와 전북도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고, 급기야는 여야 정치권 싸움으로 비화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잼버리 파행을 전북도의 책임으로 몰아가던 정부는 8월말경 새만금사업지구내 도로와 항만, 공항, 철도 등 SOC예산을 대폭삭감했고, 이에 반발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 도의회 등의 정부에 대한 싸움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9월초 전북 정치권과 도민 2천여명이 국회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도의원의 삭발투쟁, 도의원들의 마라톤 릴레이 시

위에 이어 11월7일 전북도민 5천여 명이 참여한 국회앞 총궐기 대회가 지 모두 한마음으로 정부를 규탄하고 줄기차게 예산복원을 촉구했다.

이어 군산, 정읍, 김제, 부안 등 시·군의회에서도 삭발투쟁과 원상복원을 위한 규탄시위로 힘을 보탤다. 전북도도 실의에 빠져 주저앉지 않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꾸준한 설득 노력을 펼치는 등 총력전을 폈다.

특히, 김 지사는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11월 중순부터 서울 분부에 지휘부를 차리고 상주하며 직접 국가 예산 확보 전라회의(위룸)를 주재하는 등 진두지휘에 나섰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회 단계 예산심사를 예산 복원의 찬스로 여기고 발벗고 나서서 여·야 지도부와 각 상임위,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했고, 국회 농성도 꾸준히 이어갔다.

이처럼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친 결과, 새만금예산 3,017억 증액된 총 4,513억원 복원으로 2024년 국가예산 9조100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북도 관계자는 "5개월간의 길고 긴 잼버리 수렁에서 빠져나와 전북도가 내년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가 발주한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결과보고회가 열렸다.

“거점시설 조성 시 운영관리 원칙 반영해야”

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 도시재생 사후관리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연구회(대표 운영숙 의원)가 발주한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결과보고회가 26일 열렸다.

이번 용역은 전북연구원이 맡아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것으로 도내 시군별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이미 종료된 5개 지역 및 종료료를 앞둔 50개 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도내 도시재생사업은 14개 시군 모두 진행중인데 사업종료 후 거점시설 운영관리가 가장 큰 문제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군지역의 경우 인력 및 마케팅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점시설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연구원 장성화 박사는 "거점시설을 조성할 때부터 운영관리에 대한 원칙을 반영하도록 하고 시설의 입지는 단지와 및 복합화를 통해 운영효율화를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자립적 운영관리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지침 및 관리 조례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전문기업 육성, 주민 리더 교육 등을 통해 민간 주체가 주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숙 도시재생연구회 대표의원은 "도시재생사업만으로 도시재생의 성과를 보장할 수 없게 현실이다. 사업 이후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도시재생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는 대표 운영숙 의원, 연구책임 김정수 의원, 회원 이병도 의원, 이명연 의원, 문승우 의원, 윤수봉 의원, 김정기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2월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운영숙 의원은 지난 10월, '전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례 이행을 준비 중에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지속 발굴... 26일 9차 협약

완주-전주 잇는 상생철길 조성 공공승마장 학생체험 활성화도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 상생의 보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지난 9월 8차 협약이후 세 달여만에 세 가지 사업을 추가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도와 함께 양 자치단체가 발굴해 추진하기로 한 상생협력사업은 모두 23건으로 늘어났다.

전북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9차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9차 협약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먼저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 사업 공동추진이다.

완주~전주를 잇는 만경강 중심에 위치한 문화재인 구 만경강철교를 활용하여 양지역 주민이 도보로 만날 수 있는 상생 보행로 조성을 통해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두 번째 사업은, '전주·완주 시티투어버스' 공동 운영이다.

상생 취지에 걸맞게 전주·완주 주요 명소를 오가는 시티투어버스를 공동 운영해 양지역 관광객 유치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생각이다. 미식코스, MZ세대 맞춤 등 특색있는 노선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모



2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9차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집할 예정이다. 또한 완주 공공승마장을 전주 및 완주지역 학생들의 거점승마체험시설로 활용해 학생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총 9차협약을 통해 교통, 문화, 경제, 교육 등 23개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실행력 있게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9차 상생협력사업은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도 포함돼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 복지와 경제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힘써 달라"며 "아울러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협약된 사업들도 내실있게 관리해 양 지역 주민 편익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도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상생협력 사업을 약속한 '상생철길 조성'과 '시티투어버스 공동운영'이 완주·전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머물게 하는 데 시너

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완주·전주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찾아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9차 상생협력사업은 양 시·군이 관광자원을 함께 개발하고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을 위해 협약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금까지 발굴하지 못한 분야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양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동절기 대비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점검 실시

전북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폭설 및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 대비상태를 비롯해 동절기 관리를 기울여야 할 소방·전기·가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와 안전관리 대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7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장애인 안전보호를 위해 한파주의보 등에 예외 주시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합동점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방법은 시설자체점검을 시행한

이후에 전북도와 시군이 전체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맞물려 시설종사자의 인식도 눈에 띄게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자체점검능력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서문연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동절기 안전점검과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민간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시설의 취약부분을 파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